

비인간적 성표현물 규제 방법 모색

한국간행물윤리위원회 주최 '음란폭력성 간행물과 청소년 보호' 세미나

한국간행물윤리위원회(위원장 권혁승)가 주최한 '98 간행물윤리 세미나'가 지난 20일 오후 한국프레스센터 20층 국제회의장에서 열렸다. '음란폭력성 간행물과 청소년 보호'를 주제로 열린 이번 세미나는 이태희 교수(서울교대)의 사회로 고학용 논설위원(논설위원의 <청소년 유해간행물의 음란폭력성 실태와 대책>), 이태동 교수(서강대)의 <음란폭력성 간행물이 청소년에게 미치는 영향> 등 주제발표와 종합토론 형식으로 진행됐다.

성인용 서점 등 적극적 방법 찾아야

<청소년 유해간행물의 음란폭력성 실태와 대책>의 주제를 발표한 고학용 논설위원은 청소년 보호법이 실시된 이래 유해간행물 유통에 있어서 긍정적인 효과가 나타나고 있지만 여전히 청소년들 곁에서 폭력성과 음란성을 부추기고 있다고 전제한 후 청소년 유해간행물의 음란 폭력성 실태를 구체적으로 짚어내었다.

이에 따르면 음란·폭력성 일본만화 무단 복제물은 학원폭력을 다루거나, 흥미유발에만 초점을 맞춘 반인륜적인 성관계 등을 묘사한 내용이 대부분이다. 또한 음란한 여체 사진집, 대중잡지도 여체의 특정부위만 부각 시킨다거나 체모를 그대로 노출시켜 호색적 흥미와 성적 수치심을 자극하는 사진을 다량 수록하고 있다는 것. 지난 97년 7월부터 심의를 본격화한 전자출판물은 새로운 유해간행물로 등장해 문제가 되고 있음도 강조했다.

간행물윤리위원회가 음란·폭력성 간행물에 대해 '18세 미만 구독불가'라는 표시와 함께 격리해 전시하고 판매하도록 하고 있지만 오히려 이 표시가 면죄부처럼 사용되고 있다는 점은 큰 문제로 지적됐다. '18세 미만 구독불가'만 붙이면 아무리 유해한 간행물이라도 유통할 수 있기 때문에 최근 음란·폭력성이 더 심해지는 경향이 두드러진다는 설명이었다. 고학용 논설위원은 이에 대해 두가지 대책을 제시했다. 첫째는 '간윤'이 청소년 유해물로 심의·결정한 경우 아예 시중 유통을 금하는 방법. 다른 하나는 별도의 성인용 서점·서점내 성인용 코너를 마련하는 등 청소년들이 유해간행물을 접하지 못하도록 좀더 적극적인 방법을 모색하



고학용 논설위원



이태동 교수



지난 5월 20일 열린 '98간행물 윤리 세미나'에서는 음란폭력물의 홍수 속에서 청소년들을 어떻게 보호할 것인가가 진지하게 논의됐다.

자는 것이다.

임상연구에 따른 음란물의 영향

이태동 교수는 음란 폭력성 간행물이 청소년에게 실제로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 대책은 없는지를 살폈다. 우선 유태대 빅터 클라인 박사의 임상연구에 따라 음란 폭력물이 성인에게 끼치는 영향을 분석, 청소년 유해성 여부의 근거로 들었다. 이에 따르면 음란물에 노출된 사람들은 음란물을 계속 갈구하게 되는 중독증세, 쾌감과 성적 흥분을 유지하기 위해 더 자극적인 음란물을 원하는 점증효과, 비도덕적 외설물에 대해 관대해지는 둔감화, 외설물의 행위를 실행에 옮겨 성범죄를 저지르게 되는 성적 실행에 이른다고 한다.

활발한 성적 호기심을 갖게 되는 청소년의 경우는 건전한 성발달에 장애를 가져오기 때문에 더 심각한 결과를 낳는다. 성인들이 이용한 음란물에 노출되어 임신, 낙태 및 우울증에 이른 한 13세 소녀의 사례, 음란전화에 중독되어 다른 청소년을 성적으로 학대하고 죄책감과 수치심으로 부모들과의 관계에서 긴장감을 나타낸 소년의 예에서 보듯 정상적인 성장을 방해한다. 또한 악성 음란물은 도덕적 가치관을 마비시키는 등 잘못된 가치관을 심어준다고 지적했다.

음란물에 대한 규제여부는 여전히 논란이 되고 있지만 이교수는 앞서와 같은 임상학적 연구의 결과를 바탕으로 보다 강력한 규제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표현의

자유를 마음껏 누리고 있다는 미국도 음란물 추방노력이 조직화되어 있다며 예를 들었다. 뉴욕의 '매체윤리강화협회', 신시네티의 '전국반음란물연합', 가톨릭 단체인 '전국건전간행물윤리운동본부' 등이 벌이고 있는 검열활동, 포르노 상점에 대한 반대시위, 정부의 음란물 규제법 시행 촉구 등의 음란물 퇴치 운동이 그것.

이태동 교수는 간행물윤리위원회에 검찰권 같은 법적 권한을 부여하는 등 법적으로 좀더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보았다. 또한 '18세 미만 구독불가'가 더 자극적인 음란물의 면죄부가 되지 않도록 일부 출판계의 각성을 촉구하고, 정체불명의 유해물 발행사, 점조직에 가까운 유통구조에 대한 고발과 제보를 위한 시민단체의 활약과 관계당국의 관심을 요청했다. 마지막으로 청소년보호법 발효 이후 좀 주춤했지만 여전히 기승을 부리고 있는 일본 불량만화에 대한 강력한 단속도 아울러 이뤄져야 한다고 덧붙였다.

왜곡된 성인식 심을 우려

주제발표에 이어 각계 전문가들이 토론발제문을 발표했다. 고학용 논설위원의 주제에 관해 김준호 교수(고려대)는 "청소년 비행의 보다 근본적인 원인은 각종 음란 폭력물을 쉽게 접할 수 있는 사회 분위기"라고 말하며 대안으로 ▲음란 폭력물을 특정장소에서만 파는 등 철저하게 유통을 규제할 것 ▲규제대상도 청소년 제한 음란 폭력물/청

소년 유해물/패륜적 음란 폭력물 등으로 세분화할 것을 제안했다.

한국성폭력상담소 이미경 부소장은 한국성폭력상담소의 상담사례와 통계를 예로 들어 청소년 유해간행물과 성폭력 발생의 관련성을 밝혔다. 특히 "음란물이 곧바로 성폭력으로 이어지는 않지만 성에 대한 여성에 대한 왜곡된 인식을 갖는 데 영향을 끼치고 이러한 왜곡된 인식이 성폭력에 대한 가능성을 높여준다"고 지적했다.

이태동 교수의 발표 내용에 대해서는 김의철 교수(중앙대)와 이동원 선임연구원(한국형사정책연구원)이 토론 발제를 맡았다. 김의철 교수는 <청소년 보호에 대한 사회적 책무>에서 "법적 제재가 근본적인 문제해결일 수 없다"고 전제하고 "가정과 기관 등이 청소년들 스스로 유해간행물을 취사선택, 수용하는 능력을 형성하는 데 공동의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말했다.

이동원 연구원은 청소년들의 음란물 접촉 실태를 분석하고 음란물이 청소년 성비행을 유발하는 효과가 있음을 보고했다. 그 가운데서도 폭력적인 성표현은 성폭력 유발에 막대한 영향을 미친다는 결과를 바탕으로 "규제에 있어서 성적 노출성 측면보다 폭력적이고 반사회적이며 비인간적인 성표현물 규제에 중점을 두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 정리·이현주 기자